

#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6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개정이유

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 
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(안 제2조)

나.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(안 제4조)

다.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감면기한 연장(안 제6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, 제17조, 제55조

나. 「문화재 보호법」 제27조

다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

## 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22년 5월 17일 ~ 6월 6일

나. 의견내용 : 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관련협의사항 : 해당없음

나. 부패영향 평가 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해당없음

## **9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세정과**

##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 중 “2022년 6월 30일까지”를 “2024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2021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4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2021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4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서명		세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이서구
	팀장 직위·성명	재산세팀장 김유덕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유덕 (790-5119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

제6조(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 
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) 「개  
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
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  
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그  
용도지역이 「국토의 계획 및  
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  
항제1호의 주거지역·상업지역  
·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  
에 소재하는 논·밭·과수원(이  
하 이 조에서 “농지”라 한다)이  
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 
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 
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 
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(녹지  
지역이 주거지역·상업지역·  
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 
용도지역 변경 고시일)부터 1년  
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 
하고,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  
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그  
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 
25를 경감하며, 2021년 12월 31  
일까지 이를 적용한다. 다만,  
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2조  
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

[illegible]

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.

1. · 2. (생략)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[지방세특례제한법]

**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(이하 생략)

**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)**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(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장애인”이라 한다)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「지방세법」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(이하 “자동차세”라 한다)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(이하생략)

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, 혼인, 해외이민, 운전면허취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 다만,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,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**제55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** ①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(소유자가 사용·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

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12.29.>

- ②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. <개정 2014.12.31., 2015.3.27., 2015.12.29.>
1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(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)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면제하고,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.
  2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#### [문화재보호법]

**제27조(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)**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·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.

1.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
2.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
3.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,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[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]

제3조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·산업·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·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,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]

제36조(용도지역의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1. 도시지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
가. 주거지역: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나. 상업지역: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다. 공업지역: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
라. 녹지지역: 자연환경·농지 및 산림의 보호, 보건위생,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